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무효!
평화의 소녀상을 지키는 76차 수요시위 기자회견문

7년 전 '위안부 합의' 당사자들로 꾸려진 한일정책협의단, 역사를 후퇴시키려 하는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4월 24일부터 28일까지 '한일정책협의단'을 일본에 파견 했다. 국민의힘 정진석 국회부의장을 단장으로 하여 총 7명으로 구성된 협의단 안에는 피해자와 전 세계 시민들을 충격에 빠트렸던 '2015 한일위안부합의'의 주역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어, 한일합의의 문제점이 그대로 되풀이될지 모른다는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정의연은 19일 입장문을 내어 "역사 갈등의 씨를 뿌린 사람들이 책임지는 모습은커녕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위한 투사처럼 부활한 형국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단 말인가"라며 "이들이 피해당사자와 국민의 의견수렴도 없이 '툭다운' 방식의 협상을 진행한다면 역사는 또다시 크게 후퇴할 것"이라고 하였다.

2015년 당시 '한일위안부합의'는 피해자 중심의 해결이라는 인권원칙을 철저히 저버리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해 피해자들과 시민사회가 30년 동안 고군분투해 이뤄온 성과마저 송두리째 무너뜨린 처참한 외교 농단이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 해결, 소녀상 문제 해결 노력, 국제사회에서의 비난 자제라는 일본 쪽 요구를 받아들인 충격적 합의내용은 대한민국 정부의 존재 이유를 무색케 하는 부끄러운 과오로 남아있다.

그럼에도 당시 '한일위안부합의'의 주요 책임자가 이번 '한일정책협의단'에 포함되어 대일정책의 첫 걸음을 떼기 위해 일본으로 향한다는 것은 국민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일이며 역사적인 후퇴를 자처하는 일이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조직적인 성노예 범죄로, 국제사회가 지속적으로 그 책임을 물으며 예의주시하고 있다. 피해자 중심의 인권원칙을 저버린 한일 위안부 합의와 같은 인권유린과 외교실책은 결코 재발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한일정책협의단 파견 소식에 이용수 할머니는 직접 인수위를 찾아가 위안부 문제를 유엔 고문방지위원회에 회부하고, 한일정책협의대표단과 동행할 것을 요구하였다. 정부는 "할머니들은 14살에 끌려가 지금 90이 넘었는데 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느냐"고 목 놓아 외치는 이용수 할머니의 목소리에 응답해야 할 것이다. 일본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요구에 응답하고 피해자의 인권회복과 법적 배상에 적극적으로 응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일본 정부는 전범 사실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공식으로 사죄하라!

하나, 일본 정부는 전시 일본군 '위안부' 제도가 반인도적 범죄행위임을 인정하라!

하나,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법적 배상하라!

2022년 4월 27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부산여성행동